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4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인터넷은 4월 26일(화) 오전 6시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문동민(044-203-4210), 사무관 권주현 (4215), 무역정책과장 박성택(4020), 산업기술정책과장 천영길(4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략대화 개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조기창출 방안 집중논의

① 선제적 설비투자, 미래유망분야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②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국제관행과 산업현실을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 조속 제시 예정
-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술.시장.인력 확보방안 적극 지원

③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으로 신산업 조기창출 지원
- 5대 신산업 분야, 규제 54건 중 53건 업계입장 수용, 개선
-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 지속 발굴, 개선
- 6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 5대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시설투자.연구개발(R&D) 등 금융.세제 지원 대폭 확대
- 전기차,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전략 발표(5월 이후)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 당부

① 대기업의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 정부 함께 노력
- 수직적 분업구조를 수평적.개방적 거래관계로 전환 필요성 강조

②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 확대

③ 대기업의 해외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26일(화)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열었다.

<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 개요 >

- 시간/장소: '16. 4. 26(화) 07:30～09:30 / 더플라자 호텔(메이플홀, 4층)
- 참석: 산업부 장관, 10대그룹 사장(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등)

○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산업부와 10대 그룹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다.

주형환 장관 모두발언

□ 주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10대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① 먼저,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하여,

○ 경쟁우위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리고,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협력업체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역량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도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 의지 보였다.

○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제시했다.

- 올해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연구개발(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묶어 지원한다.

- 공급과잉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조속한 시일 내 제시 예정
- 철강, 조선 등 세계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하기로 했다.

- 기타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선진국형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②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하여,

○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하기로 했다.

※ 무역투자진흥회의(2.17)에서 소관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과제 7개 중 6개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통해 수용 입장으로 변경(3.17)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 허용(행자부)
- 무인기 사업 범위를 포괄적(Negative)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등

➡ 6월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예정.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예시)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집중지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융합플랫폼 구축)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 적극 지원한다.

○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차례로 발표

③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당부

○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당부했다.

- 대기업이 해외진출 유망 협력사를 발굴하면 국제 동반사업(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으로 지원하고,

-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시설(플랜트)·기간시설(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확대 주문했다.

- 정부도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상품권(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금융담보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국제금융기구(AIIB, WB)와 수출과 사업 수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기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몰 등 대기업의 해외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후 별도 서면자료 배포)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 그룹별로 신산업 투자, 업종간 융합, 사업재편,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 10대그룹은 바이오제약, 배터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하는 한편,

○ 이와 관련하여,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연구개발(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 주 장관은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

○ 용량요금*(CP) 산정기준(현재 7.60원/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7.1 시행 예정)

* 피크 발전기(가스터빈)의 고정투자비 회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전력시장 정산금

○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고위급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했다.

* 미국 상무부 장관,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4.1), 세계무역기구(WTO) 연례 규범회의(4.25) 등

□ 한편, 30대 그룹 간담회(2.4),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3.9)를 통해 제기된 총 61건의 애로·건의사항 중 49건을 수용, 5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으며, 올해 7월까지 13건, 12월까지 14건 추가 완료하기로 했다.

○ 특히, 지난 3.9일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시 제기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확대* 등은 속도감 있게 조치(3.31) 하기로 했다.

* 에너지 공공기관 선급 지급률 확대를 통해 '16년 상반기 약 11.3조원의 자금 집행 기대, 계약 원청사 및 협력업체 약 2.6만개 자금여건 개선 예상

※ (사례) 주요 건의·애로사항 해결 현황

-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 인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2.24)
- 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 완화 : 고시 개정 (2.29)
- 엘지(LG) 디스플레이 파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투자: 전기공급약관 개정 (3.9)
- 타이타늄 생산설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 : 환경부 시행규칙개정(3.29)
-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률 확대 관련 자체지침 개정 완료 (3.31)

○ 앞으로도 창의적 대안 모색·적극적 설득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

- 특히,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 1)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참고 2)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자 명단
(참고 3)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권주현 사무관(☎ 044-203-42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1. 간담회 개요

○ **(일시)** '16. 4. 26(화), 07:30～09:30 (조찬)

○ **(장소)** 서울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 4F)

○ **(참석) 산업부 장관, 10대 그룹 총괄 CEO**

2. 행사 진행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07:30～07:35 (05′)	기념촬영	
07:35～07:45 (10′)	**모두 말씀**	· **장관님**
07:45～08:05 (20′)	**발제 및 조찬** (글로벌 환경변화 및 대응전략)	· 한국경제연구원
08:05～09:25 (80′)	**토론**	· **장관님 주재**
09:25～09:30 (05′)	**마무리 말씀**	· **장관님**

※ 간담회 종료 후 주요 내용 서면자료 배포 예정

참고 2 10대 그룹 간담회 참석자 명단

순번	그룹	참석자	소속/직급
1	삼성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 사장
2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3	SK	김 준	SK에너지 / 대표이사 사장
4	LG	이상봉	LG전자
5	롯데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운영실 / 사장
6	포스코	황은연	사장
7	GS	손영기	GS EPS / GS E&R(兼) 대표이사 사장
8	한화	김창범	한화케미칼 / 대표이사 사장
9	현대중공업	김정환	사장
10	한진	서용원	(주)한진 / 대표이사 사장

※실제 발언내용은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그룹 간담회
모두 말씀

2016. 4.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CEO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40여 차례의 현장방문, 간담회와 함께,
수출지원기관장, 금융기관장과 함께
전국 대표산단을 직접 찾아가는 수출카라반 행사도 하면서,
수출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 개최된
30대그룹 간담회(2.4)와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3.8)는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대그룹 CEO 여러분들로 범위를 좁혀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정례화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

최근 우리 주력산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수출주력품목 창출을 통해
더 이상 후발국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반도체, OLED 등 아직 후발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여 나가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친환경선박 등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1-2-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스마트공장을 확산하여
제조 全과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설계,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 대한 역량도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들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대규모 개별 투자 건마다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전력, 용수 등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R&D, 인력, 금융, 세제 등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8월에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과잉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맞추어
사업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계 합동 설명회, 기활법 활용지원단 등을 통해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하는
선진국형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 이전은 물론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사업재편 과정에 애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과감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해소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법적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의사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조기 창출방안

다음은 신산업 조기 창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지 두렵다는 언론보도가 많지만,
사실 미래 먹거리를 가장 고민하는 곳은 기업입니다.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은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44조원의 투자의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본틀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창출입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54건 중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47건은 이미 해결하였고,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나머지 7건 중 6건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거쳐 업계 요청대로 개선하였습니다.

* 수용 : 무인기 사업범위・시험비행장소,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바이오・빅데이터산업의 비식별데이터 활용, IoT기반 소방설비 형식승인기준
  불수용 :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채용의무

주요 신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진국의 관련제도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가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과제들이 논의중에 있는데,
6월중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집중지원입니다.

기업들이 제시한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R&D, 인력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신산업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완성차,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개별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이 녹아든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에도 크게 뒤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사례와 같이,
국내 기업간에도 경쟁 관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융합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5월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도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업계의 시각에서,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어떤 형태로 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산업 발전방안의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10대 그룹이 적극 참여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제언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수출활력 회복을 위하여,

중국 내수시장과
이란, 인도, 멕시코,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한편,
철강, 가전 등 주요국들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설득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도
FTA 이행위원회, 검사검역 장관급 정례협의체 등과 같은
고위급 통상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대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힘을 보태주시라는 뜻에서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의지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들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10대그룹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체 수출은 8%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많이 포함된 중견기업의 수출은
유일하게 3.2%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도 중견기업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수출도 늘고 고용도 늘어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협력사를 발굴하면,
정부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을 연계해서
협력사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력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을 통해 거래처 다변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수직적 분업관계가
수평적·개방적 거래관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강화입니다.

1975년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종합무역상사는 대한민국 수출호의 첨병역할을 해 왔습니다.
계열 분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대행기능이 약화되면서
2009년 과거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최근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기획,
금융조달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와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바우처를 통해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흥시장 중심의 플랜트, 인프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 담보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개도국 개발협력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EDCF 등 공적개발원조와
AIIB, WB 등 우리가 기여한 국제기구 자금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90년대 무용론을 극복하고
새로이 부활하고 있는 일본 종합무역상사 처럼,
우리 종합무역상사들이 다시한번 수출주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그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해외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수출확대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몰, 면세점 등
12개 유통업체가 중국, 인도 등 14개국에 진출하여,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국내제품 6천억원을 포함하여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은
우리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수출판로를 제공하고,
현지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전달하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들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과의 매칭,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유통기업과 중소 제조업체간 PB상품 공동 개발시 R&D자금 지원,
동반성장 가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외진출 유통플랫폼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그룹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제가 느끼는 산업현장은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로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제도적 틀을 제때제때 깔아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해
연초부터 약속드린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Life is C(Choice) between B(Birth) and D(Death)'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매순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특히, choice속의 ice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잘 판단하되,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술한 난관을 뚫고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을 이룩한
우리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위기극복 DNA를 바탕으로
수출활력을 회복하는데 10대그룹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